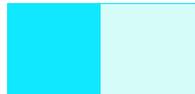


민주노총 창립 20주년 기념토론회



자 료 집

주 회: 민주노조운동 전략위원회

일 시: 2015년 9월 9일 (수) 오후 2시

장 소: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P r o g r a m

사 회	제갈현숙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장)
인사말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발표 1	박준형 (공공운수노조 정책기획실장) 민주노총의 조건과 현실, 과제 1
발표 2	이용기 (전국교직원노조 정책실장) 민주노총 마이 먹었네(?) 9
발표 3	이진숙 (인천지역본부 정책교육국장) 민주노총 20년, 지역본부 운동의 재정립을 위한 의견 16
발표 4	최승환 (부산지역본부 사무처장) 민주노조운동 역사와 현 정세를 통해 본 민주노총 과제 27
발표 5	김진억 (희망연대노조 나눔연대국장) 스무 살 민주노총, 갈 길을 묻는다 30
전 세 토 론	

민주노총의 조건과 현실, 과제

<제안된 논의 주제>

- 민주노총을 둘러싼 최근 노동 정세 및 투쟁 주체 진단
- 투쟁, 조직화, 조직운영 등에 관한 가맹산하조직별 문제의식 공유
- 창립 20주년을 맞은 민주노조운동의 전략 방향 모색

※ 토론문은 조직의 공식 견해는 아니며 개인 의견임을 밝힙니다.

1. 전략위원회 논의에 대한 의견

- (민주노총 전략위원회 논의에 대한 의견) 민주노총 집행부가 “민주노조운동 전략위원회”를 구성하여 노동운동의 전망을 논의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으나, 구성과 운영에 몇가지 우려되는 바가 있음
- (전략위 논의 대상) 논의대상은 민주노조운동 전반과 민주노총의 혁신과 관련된 사항으로 혼재되어 있음. 역량이 된다면 전자까지 논의하는 것이 좋겠지만, 현재 논의 주체의 역량을 고려할 때 후자(내셔널센터로서 총연맹, 민주노총)를 중심으로 가맹산하조직과의 관계, 위상정립을 논의하는 것이 현실적일 것임. 특히 민주노총 강화를 운동방향으로 설정하고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노동운동 노선을 정립하는 것으로 추진할 경우 이러한 논의주체 집중은 더욱 의미가 있을 것
- (전략위 구성과 운영) 민주노총이든 민주노조운동이든 노동운동의 전략 수립은 산별, 지역, 현장 활동가의 여론을 단순 종합하는 것으로는 부족함. 당대 노동계급이 처한 정세 분석과 계급투쟁 방향에 대한 정치적/이론적 방향제시가 필수적인데 이는 활동가 이데올로기의 합산을 넘어서는 것. 따라서 민주노총이 전략위원회 자문단을 구성한 것은 타당하지만, 그 구성에 있어 노동문제에 대해서 연구해왔던 최고의 지식인, 전문가들을 정치적 성향 등을 넘어 보다 광범위하게 모으고 의견을 집결할 때만 올바른 방향을 수립할 수 있을 것임(노동자운동의 발전방향을 수립하는 것은 현장에 기반하더라도 본질적으로 지적인 작업일 수밖에 없기 때문).

2. 주객관적 정세(민주노총을 둘러싼 최근 노동 정세 및 투쟁 주체 진단)

0 (주체) 노동자계급과 민주노총

- (민주노총의 형성) 3저 호황기 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형성된 민주노조운동은, 90년대

초반 경제위기와 구조조정, 재벌에 의한 과잉축적(투자)과 경제력 집중, (전노협에 집중된) 노조탄압을 겪으면서 민주노총이 설립되는 95년 이르러서는 대기업(재벌)과 공공부문 중심으로 건설, 객관적 정세변화와 일부 영역에서 새로운 조직확대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의 이러한 기본 구성은 유지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민주노총의 조직확대) 이후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공공부문(기간산업: 철도 발전 가스 등)합류와 공무원노조 건설을 통한 공공부문이 확대됨, 한편 비정규직은 제조업(사내하청/금속지역지부), 지역일반노조, 특수고용(건설, 화물), 공공부문(학교, 지자체) 등 유의미한 증가가 있었지만 아직까지 조직의 주류를 형성하지는 못함
- (현재) 결과적으로 여전히 수출대기업(재벌)과 공공부문 등 2008년 세계자본주의 위기 이후 정세에서는 경제위기의 상쇄요인(대중국 수출 호조를 보인 수출제조업, 경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 공공부문)의 덕을 본 조직·조합원이 다수, 노동시장의 안정적인 부문에 대중적 토대가 집중되고 임금 하락과 노동의 불안정화가 가속된 다수(일반적) 노동자 계급의 상태를 반영하지 못하는 조건. 또한 민주노총의 조합원 절대수는 증가했지만 조직률은 정체되거나 오히려 하락한 상태
- * 그렇다면 민주노총(그리고 공공운수노조·금속노조 등을 포함한 산하 산별조직)의 어떤 전략적 한계 때문에 △조합원 확대, 즉 노동계급의 조직적 단결의 확대가 정체했는가, △노동자계급 전체의 구성과 민주노총 조합원 구성이 괴리되었는가를 질문해야 할 때임

0 (꺾관) 자본축적과 노동시장 구조

- (자본축적의 위기) 1997년 IMF 구제금융위기 이후 재벌 집중과 금융화 심화, 2008년 경제위기 이후에는 더 이상 자본주의 황금기 혹은 남한경제의 3저 호황과 같은 성장이 상당기간 가능하지 않은 장기침체에 빠져있다는 사실 확인. 따라서 성장기에 형성된 노조의 전략, 즉 기업별 교섭, 전투적 (기업별)투쟁을 통한 임금극대화라는 전략은 이미 위기에 봉착(1차 노동시장의 기업 성과연계 성과급 인상으로 귀결).
- * 비단 경제 성장기 전략만이 문제가 아니라, 노조의 임금정책에 관한 ‘트릴레마’ (노조가 임금극대화, 임금평준화, 완전고용(고용창출) 세 개중에 하나를 포기해야 나머지를 얻을 수 있다는 노조의 딜레마)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을 취할 것인가가 검토되어야 할 것. 지금까지 민주노총의 전략은 임금극대화와 임금평준화를 기업 내에서 추구하는 것이었음. 결과적으로 임금과 고용의 모순을 기업 외부로 ‘외주화’ 하는 결과를 낳고 말았음.
- * 민주노총은 현재와 같은 기업별 임금극대화-평준화 전략을 방치해서는 안 되며 노동자 간 격차를 축소하여 계급적 단결을 강화하는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임. 노동자계급의 단결 강화는 ‘노동자는 하나다’ 라는 구호나 추상적 이데올로기로는 실현되지 못하며, 노동조합이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 노동자 간 격차를 실질적으로 감축하는 투쟁을 함께 조직할 수 있을 때에야 가능함
- (노동시장의 분단/양극화) 각종 지표가 증명하듯 실제로 노동시장의 임금/고용 양극화는 심화되어왔음. 재벌로의 경제력 집중과 자본의 분할전략이 효과적으로 작용한 것이 가장

일차적인 원인이며, 민주노총은 이에 대해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인상 투쟁을 통해 극복하기 위해 헌신적으로 지지하고 최저임금 인상투쟁을 전개하는 것으로 대응해왔음. 그러나 민주노조운동도 그 이상으로 격차를 저지하거나 완화할만한 구조적인 해결책, 전략을 거의 개발하지 못한 것도 사실(거시적 정책은 물론 사업장 단위의 미시적 교섭 정책까지 일관된 전략 부재), 결국 최근에는 정부·자본에 의해 원하청 간 임금공유 협약(SK하이닉스 사례)이 홍보되는 상황에 이룸

- (세대 문제의 부각) 87년 노동체제의 주력인 베이비붐 세대 퇴직 시작, 청년층의 실업과 비정규직화, 저출산 문제 심화. 민주노조운동은 기업별노조 체제의 신입사원 외에는 청년층에 일반화된 불안정노동자를 조직하는 전략에 한계를 보이고 있음(청년유니온, 알바노조와 같은 시도는 민주노총의 외곽에서 진행되는 상황)

3. 투쟁, 조직화, 조직운영에 대한 산하조직 문제의식

- (최근의 투쟁) 민주노총의 ‘총파업’에 걸맞는 투쟁을 조직하는데 한계를 보여줌. 현 정세에서 총파업을 포함한 모든 투쟁 수단을 동원하는 것은 정당하지만, 총파업이 가능한 조직은 상당히 제한되어 있음이 드러남(전통적인 중심대오인 금속의 약화, 전통적인 파업양식은 아닌 건설 두각, 공공부문의 법제도적 한계, 비정규직노조의 조직적 취약성 등), 한편 (고전적인 의미에서) 총파업은 조직된 노조의 지침 이전에 광범위한 노동대중의 분노가 형성되는 정세의 효과라는 점에서, 현재 민주노총이 무엇을 놓치고 있는가, 어떤 투쟁전략의 변화가 있어야 하는가에 대한 검토 필요
- (조직운영: 산별구획) 민주노총은 대산별, 1산업1노조 등 산별 편제 원칙이 암묵적으로 동의되어 있으나 그 정확한 의미에 대한 이해가 상이하고, 실제 현실의 산별편제는 이와 다름(이에 따라 조직구획과 관련된 분쟁 다발). 따라서 산별조직편제에 대해 원칙부터 실제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까지 다시 한 번 정리할 시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음, 특히 산별구획 각 산업조직이 강화될 수 있는 적절한 대책인지 여부만이 아니라 총연맹의 강화에도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인가가 중요한 판단의 요소가 될 것임
- (조직운영: 산별/총연맹 관계) 민주노총이 산별과 소통하는 주요 통로는 중집·산별대표자 회의(대표자 수준), 정책담당자회의, 조직담당자회의 정도임. 그런데 이런 논의구조는 총연맹 사업에 대한 산별의 의견을 청취하는 정도에 불과하며 총연맹 사업이란 근본적으로 산별의 사업과 별개. 이런 상황에서 총연맹 사업은 산별의 입장에서는 별도로 조직을 동원해야 할 외삽적인 사업으로 이해되는 것이 현실. 향후 민주노총 강화를 위해서는 민주노총이 기존에 산별이 수행하던 역할 중 “노동조합으로서”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조직운영: 내셔널센터로서 총연맹 역할) 총연맹은 노동계급의 전반적 상황과 정세(경제를 중심으로)를 분석하고 투쟁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으나, 정책적인 능력과 산하조직을 조율하는 기획조정력이 매우 취약, 연구소 강화이든 정책실 강화이든 혹은 조직실과 정책

실의 유기적 활동이든 어떤 대책이 필요한 상황

- (조직확대 사업) 민주노총의 전략조직사업은 취약한 산하조직에 자원을 배분하는 등 의미는 있었지만, 각 산별조직이 미조직비정규직 조직화 사업을 자기 과제화하고 투자하는 ‘조직혁신’의 의미를 실현했는지는 의문. 또한 조직활동가를 배치하는 과정까지는 진행되었으나, (애초 전략조직사업의 발상지인 영미권 노조에서도 일반적인) 조직화 전술(경영분석과 투쟁전술 등 포함)은 거의 발전되지 못하였음. 더구나 민주노총이 벤치마킹한 대표적인 전략조직사업 추진 조직인 2000년대 SEIU 등의 한계에 대한 진단과 분석도 거의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
- (공공부문 노조로서 총연맹에 대한 역할요청: 교섭구조 측면) 공공부문은 정부를 직간접 사용자로 하는 부문임. 총연맹은 정부를 총노동 정책에 대한 교섭/투쟁대상으로 하지만, 공공부문은 이와는 달리 노사관계의 (실질) ‘사용자’로서 정부를 상대해야하는 고유의 과제가 있음. 그런데 현재 정부는 이 두 가지 위상을 노사정위 논의로 몽뚱그리는 것이 현실이며, 민주노총은 산하조직의 노정교섭구조에 대해 (교원노조법/공무원노조법에 의해 민주노총 개입없이 운영되는 교섭구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별도의 입장이 없음. 한편 산하조직은 대정부 대표성에 취약하기 때문에 독자적인 대정부교섭 구조를 구축하기 어려운 상황. 그러나 공공부문 노조의 비중이 커지는 현재 상황에서는 공공부문 노정교섭 구조에 대한 대안이 필요함(이러한 쟁점에 대한 민주노총의 대안이 제출되지 못하면 공공부문 교섭구조는 최근 상황과 같이 양대노총 공공부문 간 연대를 강화하거나, 한국노총의 교섭구조에 의탁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민주노총 중심의 단결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것임)

4. 창립20년, 민주노총의 향후 전망에 대한 의견

* 민주노조운동과 민주노총은 개념적으로 구별되며, ‘창립20년’은 민주노총에 대한 것으로 이해함

0 정책과 전망

- (노동자계급의 투쟁지휘부로서의 필요한 사항) 총연맹이 전체 노동자계급의 투쟁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노동자계급이 처한 상태(특히 경제정세와 노동시장)에 대한 과학적 분석능력, 이를 토대로 하는 전략 수립 능력이 필수적일 것임. 최근 정세에서 한국노동시장의 모순에 대해 민주노총보다 오히려 정부와 자본이 더욱 적극적으로 분석하고 (자신의 입장에서) 대안을 제출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 이에 비해 노동자계급 진영은 진보정당운동의 분해와 진보적 학술운동의 침체로 인해 민주노총이 중심을 잡지 않으면 대안을 수립하기 어려운 조건에 처한 것이 현실, 민주노총 차원의 정책적/이론적 준비가 충분치 않다보니 현장에서부터 노동자계급의 적절한 요구라고 보기 힘든 각종 즉흥적, 아이디어성, 포퓰리즘적 요구가 난무하는 것이 현재 상황
- (노사관계, 노동시장 정책) 총연맹은 우선 전체 노동자를 대변하는 하나의 ‘노동조합’으로서, 자신의 기본적인 역할인 노동시장, 노사관계(이들 제도와 관행을 포함한 노동체제)에 대한 정책과 전망을 갖출 필요가 있음. 여기에는 임금-고용, 사회보장 등에 대한

체계적인 입장이 포함되어야 할 것임

- (정치·사회운동과 이념) 노동조합운동은 경제투쟁을 거치되 그 투쟁은 노동자계급의 단결에 기여해야 하며, 또한 그것에 머물지 않고 정치·사회운동을 발전해야 한다는 고전적 전망(원칙)을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이를 위해서는 자본주의를 지양하는 대안사회를 위한 노동자운동의 이념을 복원하는 것과 함께, 거시경제 등 현재 노동자계급이 처한 정세에 대한 분석이 전제되어야 함. 이를 통해 한국사회 변혁의 대안을 노사관계/노동시장과 이를 넘어선 영역까지 제시할 수 있을 것(그런데 현재는 그런 분석이 부재한 가운데 즉흥적, 아이디어성 제안이 주류). 특히 세계자본주의 장기불황 상황에서 더욱 자본주의적 혹은 사회주의적 이행 전략의 쟁점들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 예를 들어 민주노총이 주장했던 “노동존중 복지사회”와 같은 것은 어떤 변혁 전략과 연관되어 있는가? 문구로만 보면 자본주의 지양(혹은 사회주의적 이행)보다는 쇄신된 자본주의적 이행을 제시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는 (정치, 경제) 정세에 대한 과학적 분석, 조직적 합의와 토론을 토대로 제시되었는가와 같은 문제

0 초기업적 조직발전

- (기업별노조 극복) 민주노총 산하조직의 산별노조 전환율이 거의 80%에 가깝지만, 현실에서는 기업별 교섭/투쟁 체제가 주류. 재벌(현대기아차)과 정부를 상대로 하는 산별(초기업)교섭을 실현하지 못한 상태에서 한국의 교섭구조는 기업별 교섭을 넘어섰다고 볼 수 없음. 따라서 이들을 상대로 하는 교섭-투쟁 전략은 금속과 공공만의 과제는 아닐 것임. 이를 극복할 때에만 한국노동운동의 핵심인 제조업과 공공부문에서 산별교섭을 실현할 수 있을 것
- (산별체제 개편) 대산별, 1산업1노조 원칙과 그 의미에 대한 논의 필요. 총연맹과 산별노조(연맹)간 역할에 대한 논의가 과제. 민주노총이 (교섭/투쟁을 책임지는) “노동조합으로서” 역할을 증진하는 것을 전제로 민주노총 산하 산별체제 재편을 논의할 수 있을 것임. 기존의 대산별노조가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 사업을 오히려 총연맹으로 집중(강화)하고, 산별체제는 대산별 구조를 상대화할 수도 있을 것임
- * 이를 위해서는 현재보다 총연맹으로의 자원 집중(재정과 인력-총연맹 의무금 인상)을 높이는 대신 총연맹의 기능과 책임을 높이는 방향에 대한 토론과 합의 필요, 예를 들어 산별의 지역본부를 민주노총 지역본부와 통합하자는 제안이 있는데 이것이 가능하려면 민주노총으로 실질적인 권한-책임의 집중과 이를 수행할 능력의 확보도 함께 이루어져야 가능할 것
- (투쟁을 통한 조직강화, 투쟁에 적절한 조직편제) 민주노총의 산하조직 편제는 기계적인 편제 혹은 조직형식적인 구획보다는 교섭과 투쟁에 가장 적합한 형태로 구성되는 것이 타당함, 공동투쟁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가장 효과적인 단결을 지향할 필요가 있음(지역이나 업종이나와 같은 조직형식적 쟁점은 과잉된 측면이 있으며, 어떤 부문의 노동자는 지

역에서 어떤 부문의 노동자는 전국적인 산업 업종별 단결이 유리). 전국적인 총연맹으로서 민주노총은 특히 산별구획을 넘어, 가능한 부문부터 효과적인 공동투쟁을 조직(+지원)하는 상설적인 공동투쟁조직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해 민주노총의 집중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임(대표적으로 복수의 산하조직이 경쟁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영역 등이 있을 것임)

- * 공공운수노조는 과거 공공노조/운수노조/공공운수연맹(미전환 기업별노조)으로 조직의 3분할 체제에서 분산되었던 공공기관노조를 묶어 ‘공공기관사업본부’ 라는 ‘가설적 산별조직’ 을 구성하고, 대정부 교섭·투쟁의 집중을 통해 초기업적 활동을 증진해가는 성과를 만들어가고 있음. 공공운수노조가 완결된 조직편제의 형식에 집중했다면 공공기관노조의 재단결을 도모할 수는 없었을 것임. 공공운수노조는 수년간의 실천을 통해 조직편제의 모순을 이러한 공동투쟁을 통해 지양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 마찬가지로 민주노총도 공동 교섭·투쟁이 가능한 영역을 발굴하고, 민주노총이 주도하는 방식을 통해 산하조직의 투쟁력을 효과적으로 집중하고 총연맹을 강화할 수 있을 것임(여러 영역에서 ‘공동투쟁본부’로서의 민주노총)

0 교섭, 투쟁전략

- (민주노총 투쟁전략) 민주노총 총파업은 집행부의 의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며, 각 산하조직의 상황에 따라 무엇이 가능한지를 가늠한 가운데 판단되어야함(금속과 공공/서비스, 정규직과 비정규직/특고의 조건이 다르다는 것임). 따라서 조직노동의 총파업은 물론 그 이상의 투쟁전술에 대한 실사구시적인 판단이 필요한 시점
- (민주노총의 교섭전략1 : 교섭구조) 노동조합의 투쟁은 기업-산별-총노동까지 교섭과 투쟁을 병행하여 실질적인 성과를 쟁취하는 구조. 그런데 민주노총은 투쟁전술은 있지만 교섭전술은 사실상 부재한 상태임. 과거 정리해고·파견제를 합의한 노사정위에 대한 부정적 평가 때문이기는 하나, <노선>으로서 사회적 합의주의(코포라티즘)와 <전술>로서 노정/노사정 교섭은 정세에 따라 구별될 필요가 있을 것임(민주노총이 주도하는 제도적 교섭구조를 새로 만들어가거나, 현재 노사정위를 해체-대폭 개혁하여 재구성하는 것까지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 민주노총이 교섭전략을 갖지 못하면 어떤 의미있는 노사관계 주체로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럴 경우 “노동조합으로서” 민주노총은 강화되기 힘들며 공동투쟁 상황실 혹은 일종의 사회운동 조직의 성격에 머물 수밖에 없음. 민주노총이 전체 노동자를 대표하는 “노동조합으로서” 교섭권을 실행(집중)할 수 있을 때 노동계급의 단결이 더욱 증진될 수 있을 것이므로, 중장기적인 과제로 이를 위한 경로를 구상해야할 때임
- * 결국 민주노총이 현재 노동자계급이 처한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인 노동시장 분단/양극화를 노동조합을 결성(가입)하고, 민주노총을 통한 투쟁/교섭을 통해서 해결하는 전망을 남한의 노동자 대중에게 설득력있게 제시하고 실질적인 투쟁도 진행할 수 있어야한다는 것(노동자간 격차를 해소하고 계급적 단결을 강화하는 전망)

- (민주노총의 교섭전략2 : 교섭대상) 한국자본주의 구조변화에 따라, 초기업 교섭은 실질적으로는 재벌과 정부를 교섭에 끌어낼 수 있는가가 관건. 그것은 금속과 공공만의 과제는 아니며 중장기적으로 민주노총 차원에서 재벌과 정부를 상대로 임금교섭을 할 수 있는가가 문제. 이들을 상대로 하는 교섭·투쟁을 실현하는 것을 통해 노동자 간 격차를 축소해갈 필요가 있음

0 조직화

- (조직화 사업 투자, 민주노총의 새로운 리더십 형성) 민주노총의 조합원 구성은 한국의 노동자계급의 상태(노동시장 구조)와 괴리되어 있음.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대기업 하청), 공공부문 외주용역, 사회서비스(보육/간병/요양 등), 민간서비스(판매/개인서비스 등) 및 청년세대에 대한 조직화를 크게 확대해야함(각각 금속, 공공, 서비스연맹 등의 전략조직사업과 직결된 과제). 이러한 영역의 조직확대를 통해 민주노총의 구성 자체를 변화시키는데 투자/노력할 수 있도록 ‘현재의’ 민주노총 산하조직들이 동의할 수 있도록 조직하는 것이 필요. 이 과정에서 이들 부문에서 조직된 노동자가 민주노총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 필요함(의식적인 리더십 구축). 또한 민주노총이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 다수를 조합원으로 포괄할 때 민주노총을 강화하는 중앙집권적 교섭을 추진할 수도 있을 것임.

0 민주노총 혹은 민주노조운동 발전방향과 실행전략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

- (발전방향에 대한 합의) 민주노총, 민주노조 운동의 문제점 진단과 발전방향 논의는 원인 진단에서 대안까지, 정책/이론적 정당성을 가지면서도(따라서 앞서 제안한 것처럼 광범위한 진보적 지식인들을 참여시킬 필요가 있음), 조직적 합의가 가능한 핵심적인 몇 개 항목으로 도출하는 과정이 필요함. 그리고 이러한 노력은 당연히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 역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임
- (실행전략 구체화) 과거 민주노총 전략 논의에서는 추상적인 과제는 도출하였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실행전략까지 이어지지 못한 경우가 많음. 따라서 각 과제에 대한 실행계획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책임있는 후속사업이 배치되어야함.

<요약>

- 민주노총이 형성된 87~95년과 그 이후 노동계급의 객관적 조건은 변화했으나 민주노총의 구성과 운동은 이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 민주노총이 변화된 정세에 맞는 노동자계급운동의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세에 대한 과학적 분석능력, 경제투쟁에서 노동자간 격차를 축소하여 노동자계급의 단결을 도모하고 정치·사회운동으로 발전할 수 있는 이념과 전략을 수립할 능력을 확보할 수 있어야한다.
- 민주노총도 하나의 “노동조합으로서” 기능을 갖추어야하며, 이를 위해 노동시장 분석과 대안 제시 능력을 갖추어야한다.
- 민주노총의 ‘총파업’은 당위적 강조만이 아니라 각 산하조직의 투쟁양식을 분석하는 가운데 전술적 혁신을 논의해야한다.
- 민주노총과 산별의 관계에서, 민주노총 중심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나 이는 당위로만 되는 것은 아니다. 산별을 넘어선 공동투쟁을 조직하는 등 교섭·투쟁의 집중을 통해 총연맹을 “노동조합으로서”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 노동자계급을 대표하기 위해서는 투쟁과 함께 대정부 교섭대표성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대안을 수립해야한다. 특히 공공부문에서는 실질 사용자로서 정부를 상대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과제이기도 하다.
- 노동자계급의 구성과 민주노총의 구성의 괴리를 해결하기 위해 조직화 사업은 더욱 확대되어야 하며, 새로운 층으로부터 리더십이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

민주노총 마이 먹었네(?)

1. 들어가며

산별노조 건설과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기치로 창립한 지 20년 청년이 되었다. 그러나 조직 내외적으로 민주노총에 대한 인식은 노년이 된 듯하다. 민주노총은 민주노조 건설을 위해 전투적 노동조합 운동을 지향할 수밖에 없었던 시대적 상황에서 출발한 전노협의 경험을 토대로 조직되었다. 민주노총은 창립 이후 조직 확대와 노동법 개악 저지 투쟁을 힘차게 전개하였다. 그러나 IMF 사태를 거치면서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이 전면화 되는 과정에서 노사정위원회의 사회적 합의에 참여하며 대정부 관계에서 사회적 타협주의가 확산되었다. 물론 이것은 계기일 뿐이지 노동운동 내 사회적 타협주의는 항상 잠복해 있었다.

민주노총은 창립이후 조직적으로 산별 건설을 추진하고 정치적으로 민주노동당을 통한 정치세력화에 사업에 집중하였다. 물론 임금인상투쟁과 단체협약 체결을 근간으로 하는 요구불 투쟁은 계속되었다.

김영삼정부와 김대중정부를 거치면서 경제위기 국면의 흐름과 함께 정권에 의한 민주노총의 과격성이데올로기가 집중적으로 먹히는 상황이 결합하며 과격성이 조직 내 검열의 장치로도 작용하게 되었다. 이것이 조직 확대와 결합한 산별건설의 거대한 내부 조직단위의 형성과 더불어 조직의 관료화의 흐름에 대한 내부 문제의식을 압도하였다. 산별 건설이 조직 형식에서 기업별 노조를 토대로 진행되면서 산별 교섭의 토대는 마련되지 못하고 기업별노조활동을 근간으로 하는 연합적 형식이 만들어졌다.

정치세력화의 측면에서 노동자 정치의 위상에 대한 내부 논의에도 불구하고 그 상과 정치 활동에 대한 공감의 부족속에서 민주노동당의 의회진출을 맞았다. 정치활동과 노동조합의 관계가 모호한 가운데 대리주의로 흐른 정치세력화 논의는 민주노총이 통제하지 못하는 노동자 정치활동이 계속되었다. 대중적 통제를 받지 않는 당의 활동은 의회중심으로 흐르고 시민이라는 모호한 대상을 쫓는 국회의원을 바라보는 노동조합의 위상을 확인하며 이에 더해 당의 내부 분열을 지켜보며 노동자들이 오히려 정치협오를 내면화하는 상황이 되었다.

20년 민주노총, 경험은 많이 했다. 사회적 타협도 해 봤고, 노사정위원회 참여와 불참도 해봤다. 정치세력화를 추진하고 실패도 해 봤다. 그 가운데 조직은 확대와 정체를 경험하며 조직의 역사가 민주노총 운동의 전략논쟁의 또 다른 역사이기도 했다. 그런 가운데 많은 조직발전과 정치세력화에 대한 논의, 그리고 투쟁 방향에 대한 논쟁을 하였다.

오늘 또다시 그 논의를 진행한다.

본 글에서는 기억에 의존한 앞의 서술을 바탕으로 전교조의 현재 상황에서 민주노조운동의 전략적 과제를 개인적 입장에서 개진해 보고자 한다. 이후 전교조의 현재 과제와 결합한 내부논의를 통해 조합원들이 민주노총 조합원으로 인식을 확대하고 전체 노동운동에 더 적극적으로 함께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2. 민주노총을 둘러싼 노동정세 및 투쟁 주체 진단

○ 현 정세를 규정하는 것은 1) 세계경제 및 국내경제 위기의 일상화, 2) 박근혜 3년, 모든 정책 강행, 3) 2016-7년 권력재편기에 따른 계급 및 세력간 투쟁이다.

○ 박근혜 정권은 노동시장 구조개악과 공공부문 (가짜)정상화 대책에 따른 임금피크제와 직무성과평가에 따른 성과급제 등 임금체제 개편을 통한 임금 삭감, 일반해고 요건 완화, 비정규직 확대 등 노동, 경제 정책 추진 과정과 8·15 70주년 행사를 통한 국가·민족주의 이데올로기, 안보·외교 이데올로기(남북 고위급 회담과 825 합의, 중국 전승절 열병 참석 결정 이후 언론의 ‘받아쓰기’ 보도에 힘입어 박근혜-새누리 지지율 급상승) 등을 집권 후반기 국정 기조로 삼아 우익 보수 세력을 결집하여 권력 누수를 최대한 방지하면서 총·대선 준비를 본격화하고 있음.

○ 또한 ‘경제 활성화, 민생 살리기’를 ‘중·장년 세대가 양보하여 청년 고용절벽을 해소해야 한다’며 세대 간 갈등을 조장하여 ‘국가 미래’, ‘미래 세대’ 프레임으로 연결하고, 국가·민족주의 프레임, 안보·외교 프레임으로 보수 우익 세력을 결집하면서 노동자·민중에 대한 희유, 압박, 탄압, 이데올로기 공세를 더욱 강화할 것임.

○ 유럽재정위기, 중국 경제성장률 둔화, 미국 금리인상 등 영향과 가계부채의 소비 제약, 수출 부진, 추경 효과 제한 등으로 하반기 성장률은 상반기 부진을 상쇄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저성장, 저물가 상태가 지속될 것임. 이는 2016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 (2%대 성장률을 벗어나지 못할 것임)

○ 따라서 박근혜 정권과 자본은 총·대선 선거용, 경제위기를 노동자·민중에게 전가시키기 위해 이른바 ‘청년고용 절벽 해소’, ‘일자리 창출’을 주요 프레임으로 일반해고 요건 완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 비정규직 확대 등을 위한 정기국회 입법과정을 밀어붙일 것임. 결국 8~9월로 이어지는 노사정위 합의와 10~11월 국회 입법 저지 투쟁은 불가피할 것임.

○ 현재 민주노총의 투쟁 주체는 계속 물리고 있음. 상반기 노동시장구조개악을 저지하고 연금법 개악을 저지하면 박근혜정권의 정책추진력에 일정정도 제동을 걸 수 있을 것으로

봤음. 그러나 연금법 개악저지 투쟁과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 투쟁에 대해 승리의 가능성을 높게 보는 활동가와 조합원이 많지 않음.

○ 정리해고 분쇄와 비정규직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중심으로 한 장기투쟁사업장이 연쇄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자본의 공세는 강화되고 있음. 전노협과 민주노총 초기 노동시간 단축과 임금인상에 대한 요구가 이제 고용안정으로 전환되면서 임금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은 부각되고 있지 못함. 이사이 노동자들의 근무조건은 더 열악해지고 있음. 특히 정규직-비정규직, 원청-하청으로 노동자들은 분리 통제되고 있는 상황임. 분리 통제에 대한 대응보다 개별적인 생존에 집중하며 노-노 갈등과 관리에 순응해가는 노동자들이 많음.

○ 총자본에 의한 임금과 고용조건 악화가 계속되면서 비정규직, 저임금 노동자가 늘면서 자본에 대한 공동투쟁의 필요성은 확산되고 있음. 그러나 자본에 결합된 노동 강도와 시간이 늘면서 개별노동의 단결을 현실화시켜낼 수 있는 조건은 더 열악해지고 있음. 또한 소비형태자체가 노동자의 개별화를 부추기는 자본주의 소비문화가 노동자들에게 깊숙이 침투하여 단결 투쟁의 기풍은 낮아지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본의 탄압이 지속되면서 정권과 자본의 본질을 확인해 가는 과정이 단결투쟁과 개별사안을 뛰어넘는 정치적 문제로 관심을 확산시키고 있음. 또한 노동 뿐 아니라 부문의 투쟁(농민, 탈핵, 교육, 빈민, 청년학생)이 광장으로 나오는 속에서 단결의 구심을 형성할 정치적 슬로건과 정치적 대안 체제에 대한 요구는 더 간절해지고 있는 상황임.

3. 투쟁, 조직화, 조직운영 등에 관한 전교조의 고민

○ 전교조는 3년째 법외노조 저지 투쟁을 전개하고 있음. 현재 법외노조 본안 2심 재판이 진행 중임. 또한 정권의 노동시장 구조개악의 흐름으로 진행되는 교사·공무원의 임금·인사정책 개악흐름이 구체화되고 있음.

○ 교사·공무원의 임금·인사정책은 두 가지 흐름으로 진행되고 있음. 1) 공무원연금법 개악 이후 공무원·교원 인사정책 협의기구를 통하여 연금수급 연령이 65세로 늦어지면서 소득공백에 대한 대책을 명목으로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 도입을 시도하고 있음. 2) 교원평가 개선 방안으로 근무평정-성과급(개인별, 학교별)-교원능력개발평가의 세 가지 평가체계를 간소화한다는 명목하에 학교별 성과급을 없애고 근평과 성과급을 통합하여 교원업적평가 도입, 교원능력개발평가에 대한 훈령제정으로 통제를 강화하고 성과급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음.

대중의 의식이나 활동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으나, 위기의 시기에는 현실에 대한 감각이 더 나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소결 : 분회활동과 지회 활동력은 10년 전에 비해 상당히 떨어진 것으로 나타난 반면 각종 소모임 활동은 활발한 편. 전교조의 하부토대라 할 분회와 지회 활동력을 복원하는 것이 최대의 조직적 과제

○ 상반기 공무원연금개악저지 투쟁과정에서 조합원 가입이 탈퇴보다 많아 조합원 증가 경향이 나타나고 있음. 그러나 여전히 젊은 조합원 및 활동가 비율이 높지 않아 2월, 8월말 퇴임 조합원의 영향으로 조합원 확대에 어려움이 상존함. 또한 최근 교직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초임교사들의 경험의 폭의 한계는 교사들의 보수화 경향이 나타나고 있음. 이에 따라 개인화와 조기 승진대열에 합류하며 조직 활동에 대한 관심이 많지 않은 편임.

○ 전교조는 민주노총 가맹조직이면서 교육관련 연대체가 상당히 많음. 조직적으로 현안들이 항상 있음. 이는 조직운영에서 긴장감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조건이지만 지회장을 비롯한 활동가들이 현장에서 활동하기에 어려움이 있음. 또한 교육관련 연대활동이 민주노총 산하조직으로 활동보다 많음으로써 민주노총 조합원으로서의 정체성이 높지 않은 편임.

○ 전교조 범외노조 대응 투쟁, 박근혜정권의 경쟁교육과 교육장악 저지 투쟁 등 투쟁조직에서도 서명과 선전의 일상화는 서명이 활동가들의 업무로 관성화 되는 측면이 있음. 또한 조합원들의 관심영역에 따라 활동의 경중이 달라지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범외노조 대응 투쟁 등 조직의 침탈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긴장감이 형성되고 있음.

○ 조직운영의 측면에서 현장에서 교사 업무량이 증가하며 분회활동과 지회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대한 해결과 더불어 분회·지회 활성화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 과제가 있음. 또한 현재 범외상황이면 퇴직교사나 상근활동가, 예비교사까지 조직대상을 확대하는 논의를 진행해 나가야 함. 그리고 범외노조를 대비한 조직운영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음.

○ 노동기본권의 문제는 계속 내부 논쟁의 대상임. 단결권-쟁의권 사이에서 전교조의 위상에 대한 다양한 인식을 반영한 것임. 이에 따라 민주노총 조합원으로서 투쟁 참여문제와 전교조의 연가투쟁 전술은 조직적으로 전술의 유효성에 대한 입장의 차이는 계속되고 있음. 또한 연가투쟁, 집회, 서명 및 각종 사업 참여에서 소극적 조합원과 어떻게 함께 하는 가는 과제를 안고 있음.

4. 민주노조운동의 전략 방향 모색

○ 민주노조운동의 전략방향 모색은 조직적으로 고민을 하지 못했음. 전교조의 민주노총 가맹조직으로서 정체성을 어떻게 가져가야하는가가 계속되는 고민임. 전교조는 쟁의권을 포함한 노동기본권이 많이 제약되고 있음. 조합원의 민주노총에 대한 인식의 문제와 더불어 조직 자체의 전술운영의 한계로 여전히 투쟁결합에서 간극은 존재함. 여기서 노동기본권 쟁취 투쟁전술에 대한 내부 논쟁이 있음.

○ 민주노총의 전략 방향은 처음으로 돌아가서 되짚어봐야 함. 산별 건설에 대한 평가, 정치세력화에 대한 평가에서 상당한 시사점을 찾을 수 있을 것임. 현재 민주노총은 산별과 지역본부 체제임. 그럼 산별과 지역본부의 역할 분담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에서 갈려질 것임.

○ 총연맹의 national center로서 역할은 무엇인가? 의 문제임. 산별체제에서 직접 투쟁조직은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음. 그런데 각 사안에 대한 투쟁 요구는 계속되고 있음. 산별의 움직임이 없으면 민주노총이 투쟁을 조직하지 못하는 조건임에도 산별이 움직이지 못하는 사안에 대해서 왜 민주노총은 투쟁하지 않는가 하는 비판이 집중되고 있음.

○ 현안투쟁을 노동자들의 공통된 의제로 모아낼 수 있는 슬로건과 지도력에 대한 창출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임. 조직적으로 대중조직인가? 정치적 대중조직인가? 정치 조직인가? 의 문제처럼 보이는데 산별노조가 존재하고 현재는 없지만 민주노총이 직접 영향력을 행사하는 정당이 있다면 그 사이에서 대중투쟁을 모아내고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역할을 해야 할 것임.

○ 따라서 전략위원회 핵심은 노동해방 슬로건이 사라진 민주노총의 현안투쟁에 대한 전술적 슬로건이 아닌 전략적 슬로건을 어떻게 세워내는가가 중요할 것임. 이것은 슬로건으로만 머물러서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총노동이 총단결할 수 있는 슬로건을 만들어내는 것이 주요한 과제임. 총자본은 총공세를 펴는데 저들의 공격이 보이는 데도 총노동이 대응을 하지 못하며 패배를 내면화하는 현재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도전적 계급분석과 계급전선을 제출하며 죽어있는 논쟁을 전국화시키는 것이 필요함.

○ 총연맹의 역할을 지역에서 수행하는 지역 본부의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가도 큰 문제임. 지역의 연대 구심이지만 총연맹과 마찬가지로 일반노조와 사무총국 상근자 조직으로 지역의 모든 연대투쟁의 중심역할을 요구받고 있음. 대의원대회를 통해서 편법적 투쟁사업 기금에 의존해야하고 산별 지역지부의 결정에 마음줄여야하는 사업집행 시스템에 대한 해결방안이 없으면 현재 요구받고 있는 지역 연대투쟁의 구심으로 정치적 역할까지 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그 외 투쟁전술, 민주연대방안, 조직운영방안, 재정운영 등의 문제는 제한된 영역의 논의 일 수 있음. 민주노총이 박근혜정권과 대적하는 노동자의 대표기구로서 자기중심성과 집중성을 분명히 한다면 대안적 세력을 창출하는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임.

5. 나가며

20년 민주노총의 가장 큰 교훈을 얻은 것은 무엇인가?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개인적으로는 첫째 노사정 사회적대타협으로 자본가와 의 전선을 스스로 흔든 것을 든다. 현재 대타협 지도부의 위상이 이를 말해주고 있다. 그리고 둘째는 자신의 정치방침이 있음에도 보수야 당에 경도된 것이다. 지금도 평가는 동의하면서 선거 시기가 되면 다양하게 표출되는 의식의 통일성이 약한 것이 문제이다. 민주노총의 지도력(힘)이 약하기 때문인가? 아니면 통일성이 약하기 때문에 힘이 약한 것인가?

닭과 계란 논쟁에 빠질 필요는 없을 것이다. 이것을 뛰어넘는 메타언어적 개념을 창출할 전략이 필요하다. 이는 지속성과 기획이 요구된다. 노동자의 정치와 투쟁에 대한 기획을 고민하는 전략위원회가 되었으면 한다.

2015년 하반기. 정권의 노동시장구조개악과 교육장악을 통한 이데올로기 통제가 눈앞의 현실이다. 지속가능한 권력을 향한 자본의 탐욕은 자본주의 이윤축적의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작동하고 있다. 노동은 무엇을 할 것인가? 투쟁하자. 우리가 힘든 만큼 자본도 힘들다. 어차피 정치는 적과 아의 땅따먹기이면 흔들리지 않는 저들 앞에 우리도 흔들리지 않는 슬로건을 가지고 사람을 만들자.

학습하자. 조직하자는 공허한 말을 계속 외칠 것을 생각하며 글을 마치겠다.

민주노총 20년, 지역본부 운동의 재정립을 위한 의견

1. 노동운동과 지역

1) 민주노총 지역본부 위상의 혼란

○ 민주노조운동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는 사실에 누구도 이견이 없음. 총연맹, 산별노조, 지역본부 등 민주노총을 구성하고 있는 각 조직들마다 위기를 진단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은 실상 근 10년 이상 이루어졌지만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지 못했음.

○ 총연맹, 산별노조, 지역본부를 망라하여 노동운동의 새로운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조직적 논의도 2000년 '노동운동발전전략위원회', 2004년 '조직혁신위원회', 2009년 '노동운동혁신위원회' 등 3차례에 걸쳐 시도되었음. 그러나 이들 논의의 결과물은 민주노총 내부적으로 제대로 공유조차 되지 못하고 유실되고 말았음. 뿐만 아니라 그 사이 산별체계의 정착, 사회적 변화 등 민주노총 내외부의 조건은 많은 변화가 있었음.

○ 이러한 과정에서 가장 혼란과 어려움 겪고 있는 조직이 민주노총 지역본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님. 민주노총의 창립과 함께 대부분의 지역본부들이 출범한지 19~20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민주노총 지역본부의 역할과 위상은 고민거리임. 그 원인은 주로 ▲총연맹, 산별노조의 변화에 따라 역할이 변화하는 지역본부의 구조적 위상 ▲산별체계의 정착으로 인한 실질적 역할의 변화 ▲현실적 역할과 부여되는 역할 사이의 괴리(역할의 과대, 권한의 과소) ▲인력과 재정의 절대적인 부족 등이라 할 수 있음.

2) 왜 지역인가?

○ 민주노총 지역본부의 위상과 역할을 정립하기 위한 논의가 지속된다는 것은 그만큼 노동운동에게 '지역'이 중요하기 때문이기도 함. 민주노조 운동의 역사를 보아도 지역 중심의 운동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그렇다면 노동운동에게 지역은 왜 중요한가? 대략 원론적 수준에서 다음과 같은 논의들이 되어옴.

첫째, 노동운동의 필수요소인 교육과 선전, 일상 공동활동 등이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지리적 인접성은 필수적인 조건.

둘째, 지역은 노동자 민중이 노동하고, 사회화되고, 살아가는 공간임. 따라서 노동운동이 공장, 가족, 주거 등의 생활조건 및 노동조건과 관련된 활동을 포괄하는 데 있어 지역은 그 기본 단위가 됨.

셋째, 앞의 연장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대안사회는 어떤 상인지, 어떤 공동체성을 가져야 할지를 예시적 실천을 할 수 있는 거점이 지역임(민중의 집, 노동자 상호부조, 협동조합운동, 풀뿌리 자치운동 등).

넷째, 기업 단위의 노조활동이나 기업별 노동자의식을 넘기 위해서는 지역에서의 공동활동, 연대가 필수적임. 이는 산별정신의 강화의 기본 조건이기도 함.

다섯째, 투쟁 현안이 발생할 때 일차적으로 지역 차원에서의 투쟁과 연대가 가장 기본이 됨.

여섯째, 비정규직,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조직화를 위해서는 지역 차원의 접근과 전략이 필수적임.

○ 그러나 이러한 근거들은 다분히 원론적인 것으로 현재의 정세적 조건, 민주노총의 현실적 조건 속에서 지역운동이 왜 중요하며 지역본부가 왜 강화되어야 하는지에 근거가 재정리될 필요가 있음. 최근 지역(본부)운동에 대한 논의들 속에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별노조 운동에 대한 반대급부로 지역운동이 강조되는 경향이 있는 듯함. 또한 지역운동이 연대성과 투쟁성을 실현하는데 있어 현재의 산별노조 운동보다 우위에 있는 것으로 논의되는 분위기도 상당히 존재함.

○ 그러나 지역본부운동, 산별노조 운동 공히 위기에 봉착해 있는 것은 현장운동의 붕괴, 기업별 노조운동의 쇠퇴의 한계, 노동운동 외부의 조건 변화 등에 원인이 있음. 또한 현재의 민주노총의 조건이 산별노조 체제를 지역운동 중심의 구조로 대체하는 '높은 수준'의 조직재편을 감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은 자명함. 따라서 지역(본부)운동의 위상과 역할이 어느 수준과 범위에서 재정립되어야 하는가 자체도 하나의 논의과제라 할 수 있을 것임.

2. 지역본부의 위상과 역할

1) 민주노총 규정 상의 역할과 위상

○ 민주노총 지역본부 운영규정 제3조에서는 민주노총 지역본부의 주요 사업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보다시피 쟁의에 대한 지원부터, 정치세력화, 비정규직 조직사업 등 노동조합이 해야 하는 각종의 사업이 총망라되어 있음.

- 민주노총의 방침에 따른 사업추진(총연맹 수입사업)
- 지역 내 노동조합 간의 연대·교류 사업(노동조합의 지역적 연대)
- 지역 내 미조직 비정규 노동자 조직화와 미가입 노조 가입 등(미조직사업)
- 조합원 교육선전활동과 지역 차원의 조사활동(교육선전 사업)
- 쟁의의 공동지원과 노동운동 탄압에 대한 공동대응(투쟁사업장 지원)
- 노동자의 정치세력화와 지역 내 제민주세력과의 연대(정치세력화운동)
- 기타 지역본부 차원에서 필요한 사업

○ 민주노총 지역본부의 기본 위상은 지역단위에서 총연맹의 사업을 수행하는 집행기구. 따라서 위와 같은 다양하고 방대한 사업들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특성에 맞게 사업을 재구성하고 산별노조의 지역조직을 사업에 결합시키는 과정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현실적에서는 매우 어려운 문제임.

2) 지역본부 역할과 위상에 대한 주체들의 인식

○ 그렇다면 지역본부의 역할에 대해 노동조합 활동가, 간부들의 인식은 어떠할까? 2004년 조직혁신 위원회와 2009년 노동운동혁신위원회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대략을 가늠해보자.

[민주노총 조직혁신위 2004년 10월 설문조사]

※ 산별연맹과 지역본부의 영역별 역할분담에 대해

※ 조사대상 : 총연맹, 지역본부, 산별노조, 단위사업장 간부, 활동가 (단위 : %)

임단협 교섭 투쟁		장기투쟁 노조지원		민주노동당 강화		민중시민연대	
지역본부	산별연맹	지역본부	산별연맹	지역본부	산별연맹	지역본부	산별연맹
10.0	90.0	58.4	41.6	86.4	13.6	90.6	9.4

미조직 조직화		일상활동 지원		간부역량강화 교육		부당노동행위 대응	
지역본부	산별연맹	지역본부	산별연맹	지역본부	산별연맹	지역본부	산별연맹
57.1	42.9	21.6	78.4	40.9	59.1	63.3	36.7

[민주노총 조직혁신위 2005년 6월 의식조사]

※ 산별연맹과 지역본부의 영역별 역할분담에 대해

※ 조사대상 : 총연맹, 지역본부, 산별노조, 단위사업장 간부, 활동가 (단위 : %)

임단협 교섭 투쟁		장기투쟁 노조지원		민주노동당 강화		민중시민연대	
지역본부	산별연맹	지역본부	산별연맹	지역본부	산별연맹	지역본부	산별연맹
36.4	63.6	35.1	64.9	53.4	46.6	58.5	41.5

미조직 조직화		일상활동 지원		간부역량강화 교육		부당노동행위 대응	
지역본부	산별연맹	지역본부	산별연맹	지역본부	산별연맹	지역본부	산별연맹
55.8	44.2	55.5	44.5	65.3	34.7	51.9	48.1

○ 이 조사가 실시된 시점은 산별연맹체계가 정착되고, 금속노조, 보건의료노조를 선발로 산별노조 건설 문제의식이 막 시작되던 시기임. 두 개 조사의 세부적인 내용이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나 핵심적인 부분에서는 지역본부와 산별연맹 간의 역할구분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연히 드러남.

○ 산별연맹의 주요 역할로는 임단협 교섭 투쟁이 압도적으로 꼽히고 있고, 지역본부의 역할로는 미

조직 조직사업, 진보정당 관련 활동,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가 꼽히고 있음. 그렇다면 산별노조와의 관계 속에서 제기되는 이와 같은 지역본부의 역할은 제대로 수행이 되어 왔을까?

[민주노총 지역조직 실태 2009년 의식조사]

※ 민주노총 지역본부 및 지부가 '현재 주요하게 수행하고 있는 사업(현행역할)'과 '강화해야 할 사업(고유역할)'에 대한 지역본부 간부, 활동가들의 인식

※ 조사대상 : 민주노총 지역본부 간부, 활동가 (단위 : %)

구분	현행역할(%)			강화해야 할 역할(%) (고유역할)		
	1순위	2순위	합계	1순위	2순위	3순위
지역투쟁사업장 지원	50.0	25.0	37.5	20.0	15.3	17.6
지역노조 간 연대	30.0	20.0	30.0	43.3	11.9	27.7
미조직 비정규노동자 조직화	8.3	18.3	13.3	20.0	33.9	26.9
사회노동정책 개발	3.3		1.7	6.7	10.2	8.4
부당노동행위 상담 및 대응	1.7		0.8		1.7	0.8
간부역량 육성(교육 등)	1.7	5.0	3.3			
시민사회운동과 연대	3.3	28.3	15.8	6.7	18.6	12.6
정치사업		1.7	0.8	1.7	6.8	4.2
지방자치단체 관련 사업	1.7		0.8		1.7	0.8
기타		1.7	0.8	1.7		0.8
합계	100	100	100	100.	100	100

* '강화해야 할 역할'에서는 '간부역량 육성(교육 등)' 선택지가 빠짐.

○ 위 조사는 비교적 최근의 조사인데 보다시피 지역본부의 역할로 꼽혔던 대부분의 사업들은 여전히 제대로 수행되고 있지 못하고 있음. 또한 지역본부의 간부, 활동가들은 현재의 역할과 강화해야 할 역할 사이에서 괴리를 느끼고 있음.

○ 대체로 지역본부가 강화해야 할 역할로는 ▲지역투쟁사업장 지원 ▲지역노조간 연대 ▲미조직 비정규 노동자 조직화 ▲시민사회운동과의 연대가 비중있게 꼽혔음. 그러나 지역투쟁사업장 지원과 지역노조 간 연대를 제외하고는 실제 수행정도는 매우 낮은 편임. 또한 투쟁사업장 지원과 지역연대 간 노조도 순위 비중면에서는 큰 차이가 있음.

○ 결론적으로 말하면 민주노총 지역본부가 여러 제약조건 속에서 투쟁사업장 지원에 역량과 자원의 상당부분을 투입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음. 또한 지역본부 운동 주체들의 지역노동운동의 현실 속에서 적극적으로 전망을 만들어나가는데 수많은 제약조건이 있음을 보여줌.

3) 지역본부 실제 사업 현황

사업영역	내용	사업비중
투쟁지원 사업	대체로 산별노조 지역조직/중앙의 관장력이 치미지 못하는 투쟁, 장기투쟁사업장에 대한 사후지원 투쟁	기본사업-필수사업 전체 사업에서 약50% 비중
총연맹 수입사업	각종 총연맹 수입사업	
조직관리사업	투쟁지원사업, 총연맹 수입사업과 연동하여 산별지역조직, 단위노조에 대한 일상적 지원 활동	
대협사업	지역 상설연대체인 '인천지역연대'의 중심적 활동	
미비사업	상시적 지원 사업 : 금속 공단 조직사업단, 공공운수 지자체 조직사업 총연맹 지침에 따라, 사안별 필요에 따른 지원사업 : 서비스 유통 조직사업(홈플러스, 이마트)	필수사업 기초 형성 단계 - 전체 사업에서 약 20% 비중
각 위원회 사업	미비, 노안, 여성, 통일, 정치위원회가 운영 중이나, 위원회 구성의 취지에 맞게 각 산별 지역조직의 참여 하에 운영되는 위원회는 거의 없음	기본사업 - 전체사업에서 약 10% 비중
정책사업	정형화된 사업들의 부재. 대지자체 관련 사업이 고유한 정책사업 영역이기는 하나 안정적인 지자체 교섭구조의 부재 속에서 산별에 대한 사안별 지원에 머무르고 있음	지원사업/독자사업 - 전체사업에서 약 20% 비중
교육사업	노동자학교, 강좌 등 동원식 교육사업과 단위노조 교육사업 지원 등으로 구성	
선전사업	각 부서 사업에 대한 선전홍보 사업 및 소식지 발간 등의 일상 선전·언론사업	
전략사업	비정규 노동자 조직사업 거점 및 문화교육기관으로서 '노동자의 집' 설립 구상 여러 제약 속에서 추진력을 받지 못하는 상황	

3. 검토되었던 대안들

○ 지역본부의 위상 및 역할을 정비, 강화하기 위한 민주노총의 조직적 논의에서 다음과 같은 대안들이 제출되어 왔음.

① 2000년 노동운동발전전략위원회(단병호 위원장)

- 2000년대 노동운동의 전략 좌표와 조직문화 개선 중심으로 7대 전략을 제시했지만, 조직적 논란과 갈등으로 인해 의결단위에 공식 사업계획을 제출하지 못한 채 마무리.

■ 민주노총 지역본부와 연맹의 역할을 분명히 한다.

- 민주노총 지역본부의 역할 : 중앙에서 수입받은 대정부 · 대자본투쟁, 정치사업, 민중연대사업, 통일투쟁, 미조직노동자 조직사업, 탄압에 대한 연대투쟁
- 산별연맹 지역조직의 역할 : 임단투, 산별교섭과 투쟁, 단위노조 일상활동

■ 지역본부 체계

- 광역단위 민주노총 지역본부는 대의원대회-운영위원회-상임집행원회를 기본구조로 하고 필요에 따라 단위노조(산별노조 지부, 분화)의 대표자회의를 소집하는 것으로 한다. 이 때 운영위원회는 각 산별노조의 지역조직 대표자 및 민주노총 지역본부 임원으로 구성됨을 원칙으로 한다.

- 지역사업은 특성상 지방자치단체에 대응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각 산별조직은 지역조직 기획범위를 가능한 민주노총 조직체계(광역시도 기준)에 맞추어 나간다.

② 2005년 조직혁신위원회(이수호 위원장).

- 2005년 조직혁신위원회 보고서는 산별노조 건설과 지도집행력 강화 중심으로 6대 혁신과제를 제출. 9월 대의원대회에서 산별건설 특위와 결의문을 채택하고 조직혁신위를 계속 가동하기로 하였으나, 지도부 사퇴로 중단됨.

- 당시 혁신과제를 마련하기 위해 산하노조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의식조사를 두차례 실시하였는데, 조직실태파악을 위해 산하노조 및 상급단체(산별노조 및 지역본부) 활동가 의식조사를 진행하였음.

■ 집행점검기능 강화

- 산하조직의 업무 표준화 조속 완료 → 지역본부 사무처 통합운영 체계 완비

■ 산별연맹-지역본부 역할 정비

- 산별연맹과 총연맹 지역본부의 역할을 정비하여 집행의 중복을 피하고 사업의 효율을 높이는 방안 필요 → 총연맹, 연맹, 지역본부, 연맹지역조직 간 사업, 인력, 재정배치의 가이드라인 설정
- 지역단위 정치사업, 연대사업, 미조직조직화 사업은 총연맹 지역본부가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교섭과 투쟁, 교육사업은 산별연맹이 주로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산별연맹과 민주노총 지역본부의 업무를 조정하는 방침을 마련함.

③ 2009년 노동운동혁신위원회(임성규 위원장)

- 2010년 정기대의원대회에 보고서를 제출하고, 집행계획을 마련한다는 구상이었으나 이 역시 호지부지.
- 당시 혁신위원회는 세 개분과로 구성되어 논의를 진행하였는데, 그 중 하나인 지역분과의 논의와 연동하여 '민주노총 지역조직 실태와 과제' 연구사업이 진행되었음.

■ 지역본부 강화전략의 수립.

- 다수의 산별연맹이 아직 산별노조로 조직전환 중이고, 전환을 완료한 산별노조도 지역 단위현장까지 충분히 관장할 수 없는 상황이 오랜 기간 지속. 따라서 지역본부의 현장개입력이 강화될 필요
- 씨줄과 날줄로 촘촘하게 현장개입력을 높일 수 있는 조직체계와 사업체계를 도출하는 방향으로 지역본부 체계를 정비하고 강화
- 정치투쟁과 집권운동의 장이라는 점에서 지역사회에서 지역본부의 정치적 위상과 역할을 빠르게 높이는 방향으로 지역본부 강화방안을 마련

■ 노동의 지역개입력 확대강화 방안 수립

- 지역본부 위상과 역할 강화를 위한 조직체계와 조직운영 정비
- 지역 미조직 비정규 노동자 사업 강화
- 대지자체 교섭과 투쟁 강화
- 일터와 삶터를 결합시킨 민주노총 일상적 지역사업 전형 창출
- 산별노조 지부(본부), 민주노총지역본부(지부), 진보정당지역위원회의 삼각사업체계 구축

④ 민주노총 총서 「산별노조 시대, 민주노총의 위상과 역할」 (김영훈 위원장)

산별조직이 민주노총의 골간조직이라는 기본 원칙 하에 다음과 같이 지역본부의 역할 강화

■ 행정지역 근간에 생활공동체를 고려한 지역본부의 조직 개편 필요

- 현재의 행정구역별 편제가 생활공동체와 맞지 않는 지역본부 조직의 개편(예>경기본부 북동부와 남서부 간의 단절, 대전·충남본부나 대구·경북본부의 애매한 조직구획)
- 지역본부와 산별노조 지역조직 간의 사업연계 활성화
- 대지자체 교섭의 추진
- 지역차원의 비정규직 조직화 사업의 수행

⑤ 평가

○ 검토되었던 대안들 모두 큰 틀에서 보면 산별노조의 핵심 사업이 대체로 투쟁의 지원, 지역본부 사업의 핵심이 정치세력화, 지역연대운동, 미조직 비정규직 조직화, 대지자체 투쟁에 있다는 점이 동일.

○ 그러나 세부적으로 보면 매 시기 민주노총 내외부의 조건을 반영한 진단과 대안이 반영됨. 산별연맹 체계가 중심인 2000년의 경우 산별연맹과 지역본부의 역할을 분명히 정립하는 것이 강조되고, 산별노조로의 전환이 시작되던 2004년의 경우 체계의 재정비가 강조되고 있음. 그리고 2009년의 경우 산별노조 전환과 정착이 지체되면서 지역본부의 현장개입력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음.

○ 또한 총연맹과 산별노조로 집중되어 있는 인력과 재정구조를 개편하여 지역본부의 인력과 재정이 확충되어야 한다는 진단은 매시기 제출되었지만, 구체적인 대안은 그다지 제시되지 못함.

○ 현재 시점에서 본다면 이와 같은 지역본부의 역할과 위상 정립은 제대로 수행되지 못했음. 민주노총 내외부의 조건의 측면에서 본다면 2009년의 상황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음.

4. 지역본부 운동의 평가 쟁점

① 지역본부 별 집중사업의 다양성, 위상의 정형부재

- 16개 지역본부들의 집중사업, 그를 바탕으로 한 조직위상, 조직관리 방식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음.

- 몇가지 예를 살펴보면, 지역본부 직가입 조합원 수를 보면, 전혀 없는 지역본부가 있는가 하면, 수천명이 있는 지역본부가 있음. 이는 미조직 사업에 대한 역량집중, 조직화 성과의 조직편재에서의 판단의 상이함을 반영하는 것임. 또한 선거시기 정치활동에 대한 집중 정도도 지역본부 마다 상이하며, 특히 산별과 비교해 집행부의 정치적 성향에 따른 자율성도 매우 큼.

- 물론 여기에는 각 지역본부 마다의 운동역사, 지역운동 전반의 상황 등과 같은 조건이 반영되어 있음. 그러나 앞서 살펴보았듯이 민주노총 내적으로 지역본부의 위상과 운동방향에 대한 합의, 재정립 과정이 부재했던 현실 또한 반영되어 있음. 이는 총연맹의 사업 중 지침하달식 수임사업 외에 지역본부 핵심사업에 대한 지원-관장체계가 부재함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함.

② 산별 및 단위사업장에 대한 발생한 현안투쟁 지원 중심

○ 산별노조 및 단위사업장과 함께하는 투쟁, 사업에서 압도적으로 투쟁사업장 지원활동의 비중이 높음

○ 이에 대한 평가는 양면적임. 한편으로는 민주노총 지역본부가 산별노조 지역조직과의 관계에서 가지는 위상과 역할의 모호함 때문에 일상적인 현장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발생한 투쟁에 대한 사후 대응에 머무르고 있는 한계를 보여 줌. 다른 한편으로는 많은 산별노조 지역조직들의 역량의 취약함으로 인해 지역본부의 지원과 개입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보여줌.

○ 이런 측면에서 최근 노조탄압, 임단협 투쟁의 장기화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조건에서 민주노총 지역본부의 현실적인 역할과 필요는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임.

③ 자원과 역량의 절대적 부족

○ 민주노총 지역본부의 일상사업은 사실상 매우 기본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위원회 활동은 매우 형식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또한 교육선전, 정책, 조직 등의 일상사업도 현안 투쟁의 일환으로 진행되거나 매우 기본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특히 정책사업의 경우 16개 지역본부 가운데 정책담당자가 있는 지역본부는 손가락에 꼽힐 정도로 지역본부 사업에서 주변화되어 있음.

○ 이와 같은 현실은 두 가지 측면에서 주요 원인이 있음. 하나는 재정, 인력 등의 지역본부 자원의 절대적인 부족, 그로인한 역량의 제한성에서 기인함. 재정과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단순히 일할 사람과 돈이 부족하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음. 지역본부가 일상적으로 역량을 투여해서 꾸준히 운동의 성과를 축적해 나갈 수 있는 사업영역, 사업 메커니즘이 사실상 부재함을 의미함.

④ 산별노조 지역조직의 사업 결합력 한계와 편차

○ 지역본부의 일상사업이 매우 제한적인 수준에서 진행되는 이유는 지역본부의 인력, 재정의 절대적 한계와 더불어 산별노조 지역조직들의 결합력이 매우 낮고, 산별노조들 마다의 조건(지역조직의 규모, 전임자 및 상근자 여부 등)에 따라 격차가 크기 때문임

○ 이 문제는 당장의 사업결합이 낮은 문제에 그치지 않음. 지역본부의 투쟁지원, 공동사업이 활발한 산별노조들은 오히려 비교적 규모가 있고 자체 활동역량이 있는 산별노조들임. 상대적으로 조직규모와 자체 활동역량이 작은 산별노조 지역조직들은 자체 사업에서도 매우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회의체계 결합 등 기본적인 결합이 되지 못하고 그로인해 지역본부의 지원도 오히려 어려운 상황임. 악순환의 반복임.

⑤ 지역연대운동 한계

○ 전선운동과 상설연대체 운동이 형해화 된 이후 지역연대운동은 전반적으로 일회성, 사안별 대응의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 진보정당의 분열은 당연하게도 지역연대운동의 분열로도 이어져 지역연대운동의 통합력을 저해하는 주요한 요소임.

⑤ 총평

○ 이상의 평가 쟁점을 집약하면 지역본부 위상과 역할 상의 쟁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됨.

- 노동조합 체계 내에서의 위상의 과소, 지역운동 내에서의 위상의 과대
- 현안투쟁에 대한 지원을 중심으로 하는 현실적 역할과 필요도의 강화
- 일상사업과 결합력의 측면에서 노동조합 내부 체계 내에서의 낮은 권한과 위상
- 미조직 사업에서의 역할 강화와 지원과 역량의 부족
- 실제 실력과 역할에 비해 지역운동 내에서의 과도한 책임과 위상

5. 지역본부 운동의 재정립의 방향

○ 앞선 논의들에서 살펴보았듯이 민주노총 지역본부는 총연맹, 산별노조, 산별노조 지역조직과의 관계 속에서 많은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조직임. 따라서 지역차원에서만 민주노총 지역본부의 역할과 위상을 고민하는 것은 매우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음. 또한 지역본부의 강화가 몇 차례의 토론이나 단발적 사업으로 달성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님.

○ 그렇지만 현재의 민주노조 운동의 위기, 특히 산별노조 운동의 위기와 정치세력화 운동의 좌초라는 조건 속에서 민주노총 지역본부의 현실적 역할은 커져가고 있는 동시에, 지역본부의 역할과 위상도 재정립 될 필요가 커지고 있음. 시론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향을 제안함.

■ 지역본부의 표준화된 위상과 역할에 대한 합의

- 산별노조 운동과 지역본부 운동의 통일적 발전을 위해서는 핵심 사업 중심으로 지역본부의 표준화된 위상의 합의가 필요. 현재 변화된 민주노총 내외부의 조건을 반영하는 가운데 지역본부의 핵심 역할도 재규정되어야 함.

■ 지역투쟁의 구심으로서의 지역본부

- 지역본부 사업의 상당한 비중을 투쟁사업장에 대한 지도·지원이 차지하면서 다른 사업에 집중과 투자가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 역할은 기각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이후에도 지역본부의 중점적 역할 일 수 밖에 없음.

- 물론 이러한 역할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대책도 없는 것이 사실. 산별노조의 권한과 책임을 기능적으로 이양받겠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도 아님. 지역본부가 지역 노동자 투쟁의 지도부로서의 위상을 분명히 한다는 것은 지역본부의 위상과 역할을 재정립하고 지도·집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꾸준한 노력의 과정이자 결과물일 것임.

■ 지역 노동운동의 센터로서의 대지자체 사업

- 지자체 대응은 지역본부의 주요 사업이 되어야 함. 지역본부 집행부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투쟁이냐 교섭이냐는 노선 차이가 강조되기도 하지만, 사실상 현실에서 큰 변별력은 없음. 왜냐하면 어떤 지역본부도 지자체 사업에서의 사업 정형과 개입력을 가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 이는 지역 내에서 특히 지자체 부분 내에서 민주노총의 낮은 조직율에 원인이 있기도 함.
- 민주노총이 지자체를 상대로 요구하고 싸워야 할 것들은 매우 많음. 지자체가 직간접적 사용자가 되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노동권, 지자체가 정책적·제도적 권한을 다소나마 가지는 건설 부문, 산업 단지 문제, 그리고 지역 단위로 제공되는 각종 공공서비스와 노동자 복지 등이 대표적. 이들 중 일부는 조직화 사업에서 그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기도 함.
- 지역본부가 지자체 사업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총연맹 차원의 통일된 사업 방향, 사업구조 마련 등이 전제되어야 함.

■ 미조직사업·상담사업 센터로서의 지역본부

- 민주노총의 전략조직화 사업, 산별들의 전략조직 사업 대부분이 사업 집행이 지역에서 이루어짐. 또한 대부분의 지역본부들이 상담 센터를 두고 노동자들에 대한 상담과 교육을 진행하고 있음. 상담 경험이 오래된 지역본부의 경우 상담을 통해 민주노총에 우호적인 노동자 풀을 상당수 확보하고 있음. 상담사업의 일차적인 목표는 노동조합 조직화가 되어야 하지만, 중소기업 사업장 노동자들의 노동권 보호, 민주노총의 우군을 확대해 나가는 데 지역본부의 상담 사업 자체의 의미도 커지고 있음.
- 이런 역할을 종합하여 노동자 조직화 사업 센터로서 지역본부의 위상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음. 물론 그를 위해서는 인적, 재정적 자원의 확충이 필요. 조직활동가들 간의 공동 교육·훈련. 조직화 사업의 토대가 되는 지역 내 산업 부문에 대한 연구·조사 및 정책 지원 사업. 상담을 늘리고 민주노총에 우호적인 여론을 만들기 위한 캠페인 사업. 상담으로 형성된 노동자들과의 관계를 지속하기 위한 사업 기획과 체계적인 관리. 이러한 사업을 보다 체계화, 강화할 필요가 있음.

발표 4. 최승환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사무처장)

민주노조운동 역사와 현 정세를 통해 본 민주노총 과제

1. 세 가지 기사로 본 현 정세

- 8/6 박근혜 대통령 담화, 9/2 김무성 교섭대표 연설
- 민주노총 박이경 대외협력실장 (미디어오늘 9/4일자 기사)
“사회적으로 거리감이 느껴지는 집단 1위가 중북 세력이고 2위가 성소수자였다”
- “민주노총이 안보인다” (한겨레 8/19일자 기사)

- => 미국식 금융자본주의가 아닌 새로운 모델에 대한 열망과 요구
20세기, 21세기를 거치면서 세계 각 국의 변혁의 모델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음
- => 미국 중심 일극시대에서 G2 시대의 도래,
구한말 동북아정세와 유사하지만 근본적 질서재편으로 나아가고 있는 한반도와 동북아
- => 노통김통 10년, 개혁보수 10년, 수구보수 10년의 30년 / 친미보수연합진영의 헤게모니 장악
- => 노동시장을 완전한 사용자위주로, 완전한 신자유주의화로, 70년대 군대식 사업장으로
- => 진보진영의 보루 중의 하나인 민주노총에 대한 마녀사냥 본격화
- => 민주노총 사회적 영향력, 조직력 투쟁력, 방향성 상실?

2. 지난 30년 노동운동은 조합주의, 경제주의 노동운동?

- 87년 ~ 97년 : 전투적 조합주의, 공세적 조합주의
=> 전국적 대중적 노조, 민주노총 건설 / 96~97 총파업 투쟁
- 97년 ~ 15년 : 총파업운동 / 정치세력화 / 산별노조건설의 전략
=> 총파업? 뺑파업? / 진보정당 분열 해산 / 무늬만 산별 산별? 산별패권주의?
=> 정규직 비정규직 노동시장 이중구조 고착 / 계급적 단결 전략 부족 부재
=> 신규채용은 없고 기존 조합원은 고령화 / 간부기피현상
=> 경제주의 / 정파간 경쟁과 갈등 / 조합원 실리주의 고착화?
=> 비정규직, 대상에서 주인으로
- 주동력에 대한 재설정, 주방향에 대한 재설정을 통해 방어국면을 끝내고 공세적인 노동

운동으로, 세상을 바꾸는 노동운동으로 나아가야 할 신작로를 깔아야 한다.

새로운 길은 타협 절충, 합법 개량, 특권 관료, 고립 배제 갈등 / 경제주의 조합주의 기회주의를 뛰어넘어야 한다.

3. <세상을 바꾸는 노동운동> 방향? - 일단 담벼락부터 넘고 보자

- 공장의 담벼락을 넘어야 한다 (계급적 단결, 진보민중의 단결, 반신자유주의 국제연대)
- 고용형태의 담벼락을 넘어야 한다 (계급적 단결, 비정규운동에서 새로운 활로를)
- 마음의 담벼락을 넘어야 한다 (정파 갈등 극복, 민주노총 총단결)
- 분단의 담벼락을 넘어야 한다 (노동자반전평화통일 활성화)
- 지역의 담벼락을 넘어야 한다 (지역본부 강화, 산별노조강화)
- 보수개량정치의 담벼락을 넘어야 한다 (제2의 노동자정치세력화)

4. '투쟁중심은 언제나 정당'

-단, 임단투 -> 법제도개선투쟁을 기반으로 하되 그 방향을 명확히 하자

- 미국중심의 신자유주의 공세에 맞서 반FTA투쟁, 반먹튀자본투쟁, 반전평화투쟁을 강화
(모든 것은 신자유주의 세계화에서 시작된다 - 예속 빈곤 공황 전쟁과 분단)
- 노동시장을 양극화하고 노동운동의 분열을 야기하는 정권과 자본의 의도를 뚫고 비정규직조직화와 비정규직투쟁을 강화
- 노동기본권 말살, 노조죽이기 탄압을 분쇄하고 노동기본권을 사수하고 발전시켜야
- 종북의 고리, 분단의 가장 큰 피해자는 노동자
한반도 반전평화통일운동을 전면화하고 대중화하자
- 사회적 양극화, 빈곤을 분쇄하고 공공복지를 확대하는 투쟁

5. 담벼락을 넘어 노동중심의 정당 - 노동중심의 전선 - (노동조합운동이 아닌 노동운동을 하는) 노동조합의 트라이앵글 구축

- 노동조합운동과 정당운동 전선운동은 별개야
- 하면 좋은 거지만 굳이 할 필요도 없어... 우리 사업장일만으로도 바빠
VS
- 우리 사업장 문제로 대책위 만들어야 하는데 꾸리자고 제안해야 겠다
- 정부는 저렇게 밀고 있는데 도대체가 말이야 사람들이 뭐하는 거야?

=> 필요할 때만 찾거나 손벌리거나 욱할게 아니라
노동자가 중심에 서서, 민주노총이 합심해서 만들자

6. 지역본부 강화 - <잘하면 본전, 못하면 욱먹는 지역본부?>

○ 올해 일상적 총연맹 수입사업

: 예 - 지역총과업, 지역선전전, 지역민중대회, 긴급기자회견 성명서 항의방문, 긴급상경지
침, 타지역 연대투쟁(집회참가, 주점, 서명, 탄원)

○ 최근 총연맹 차원 지침 중

- 직선제 토론회 임원 1명, 집행부 1명
- 지역민중대회 집행책임자 임원 1명
- 전략위원회 임원 1명, 집행부 1명
- 사회연대위원회 임원 1명

○ 상근 임원 2명과 사무처 6명이 해야 할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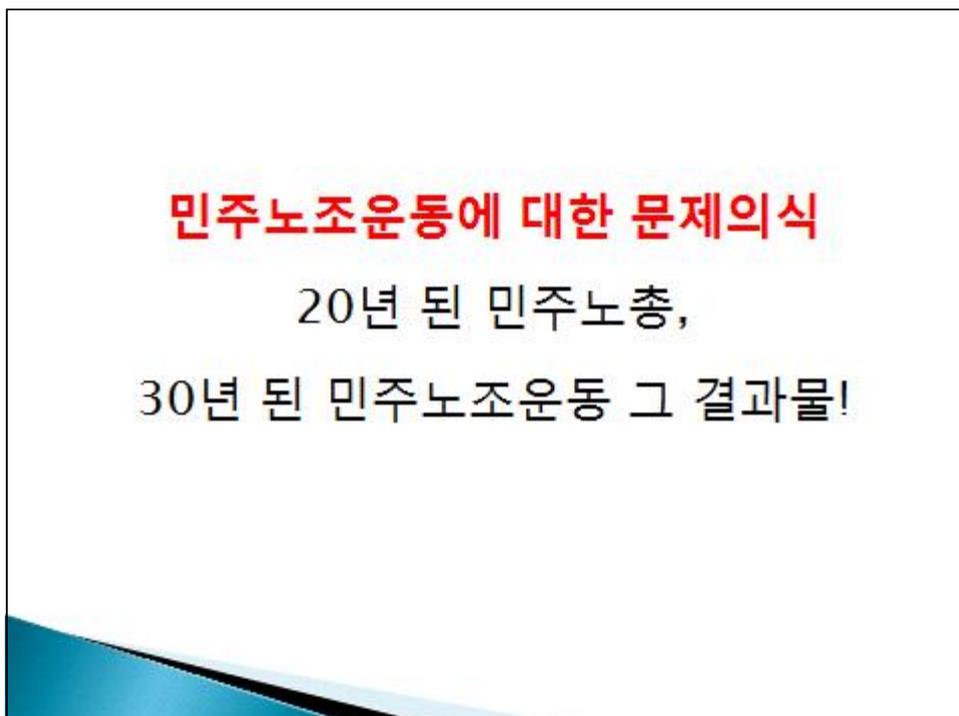
- 총연맹 수입사업
- 지역현안투쟁 지원 (해당 연맹 단사 간부만큼 상황파악을 해야 한다)
- 연맹 단사 주요현황 파악
- 연맹 및 단사 간담회 / 교육
- 대시민선전전 조직화와 집행
- 미조직 비정규사업
- 대지자체 투쟁
- 대협 문화 정치 통일 사업
- 재정분담 조직
- 각 종 회의조직

○ 재정, 인원에 대한 총연맹 차원이 파격적인 지원

7. 기타 - 중집의 책임있는 결정, 지역과 현장에 근거한 결정, 산별노조의 책임 있는 집행

발표 5. 김진억 (희망연대노조 나눔연대국장)

- PPT 자료로 대체(이하 참조)



1) 민주노총 조합원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 ▶ 자본에 종속된 체 비교하고 경쟁하며 아등바등 살기.
- ▶ 아이들 경쟁에 뒤처지지 않게 사교육 시키기
- ▶ 병들었을 때, 노후를 생각해서 사보험 들기
- ▶ 주식, 부동산 등 재테크/ 소비 향락 문화
- ▶ 이웃, 친지와 비교, 경쟁하기

사업장에서 머리띠를 묶고 투쟁하지만
일상에서는
이 사회가 강요하는 자본에 종속된 삶을 살고 있다.

2) 작업장 담벼락에 갇힌 노동조합

- ▶ 작업장에서 고용과 임금인상 투쟁에 주력
- ▶ 잔업 특근해서라도 임금 더 받아야! 장시간 노동-일중독
- ▶ 주머니에 들어가는 돈을 불러주는 노동조합
- ▶ 민주든 어용이든 실리 보장한다면 OK(물신화, 돈의 노예)
- ▶ 간혹 전투적일 수밖에 없음 - 그러나 사회권리 투쟁에는 무관심

실리주의, 조합주의 운동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3) 꼭 기존노조운동 방식과 형식이어야 하는가?

- ▶ 묻지마 무늬만 산별노조
- 조직 형식, 조직만들기에 치중하면서 산별 정신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지향과 목표, 사업을 가지고 있지 못해!
- ▶ 신자유주의 시대 적합한 조직인가?
- 신자유주의가 생활, 소비, 문화, 재생산 공간까지 상품화, 시장화하는 시대. 삶의 영역까지 깊숙이 침투하고 있는 상황
- 『(1) 생산과정과 작업장을 매개로 한 생존권 투쟁이라는 활동 방식만으로 (2) 중앙집권적 서구형 산별노조』 로는 한계

3) 꼭 기존노조운동 방식과 형식이어야 하는가?

- ▶ 조직문화, 조직형식 측면에서 경직성, 관성화
 - 규정화된 절차와 방식, 역할 구분
- <노동자운동에 대한 협소한 이해를 벗어날 수는 없을까?>
- ▶ 꼭 노동조합이어야 하는가?
 - ▶ 산별노조가 아닌 새로운 방식의 노조운동은 없을까?
 - ▶ 작업장 담벼락을 넘는 노동자운동은 할 수 없는가?
 - ▶ 역일반노조(형식), 방식(사회운동 결합)

4) 양날개론 - 노동자 정치세력화 실패

- ▶ 대중 주체의 정치운동을 하지 못했다.
- 의회 진출의 필요성, 그러나 의회주의
- 돈 대주고 몸 대주고 조합원, 대중을 대상화시켰다
- ▶ 그리고 권력을 향한 진흙탕 싸움을 했다.
- 패권주의와 분파주의
- ▶ 뿌리 없는 집권 전략

5) 오래전부터, 누구나 이야기하는 혁신! 그래서 뭐?

- ▶ 혁신을 이야기 하지만 추락하고 있는 운동
- ▶ 성찰과 반성은 잘 보이지 않고
- ▶ 그만큼 변화와 혁신의 주체가 보이지 않는다.
- ▶ 새로운 대안이 되지 못한 지난 10여년 간의 비정규운동
- ▶ 투쟁의 격렬성, 전투성으로 새로운 운동이 가능한가?
- ▶ 기존 운동으로 편입되어 들어간 비정규직노조
- ▶ 어떤 조직화, 어떤 방식, 지향을 담보한 투쟁과 활동인가?

6) 종파 운동으로 허물어지는 민주노조와 진보 정당운동

- ▶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 ▶ 기준도 원칙도, 기본적인 민주주의도 없다(부정선거 논란)
- ▶ 대중조직의 건강한 성장 보다는 자기 집단 세 키우기
=> 땅 따먹기, 줄 세우기, 권력 장악하기
- ▶ 개인의 보상 욕망과 정파의 이해관계, 세 확장
- ▶ 괴물들을 만드는 잘못된 운동(상처를 주고 받으며 비정상 운동을 만드는 개인, 집단의 존재)
- ▶ 근데 모두 변화와 혁신을 외치고 있다.

* 정파적 갈등과 문제가 악화되고 있다고 이야기 존재

몇 가지 지표

40-50대 우리들이 만든 세상
민주노총이 만든 결과물

1) 민주노총 조합원은 상위 몇 % 일까?

광주 기아차 노동자 임금격차

고용 형태	평균 연봉
기아차 정규직	1억원
광주공장 사내하청	5000만원
1차 협력사	4700만원
1차 협력사 사내하청	3000만원
2차 협력사	2800만원
2차 협력사 사내하청	2200만원

자료:한국노동연구원·2014년 기준

1) 민주노총 조합원은 상위 몇 % 일까?

2014년도 근로자 소득분위별 전체 근로자 소득 중 차지하는 비중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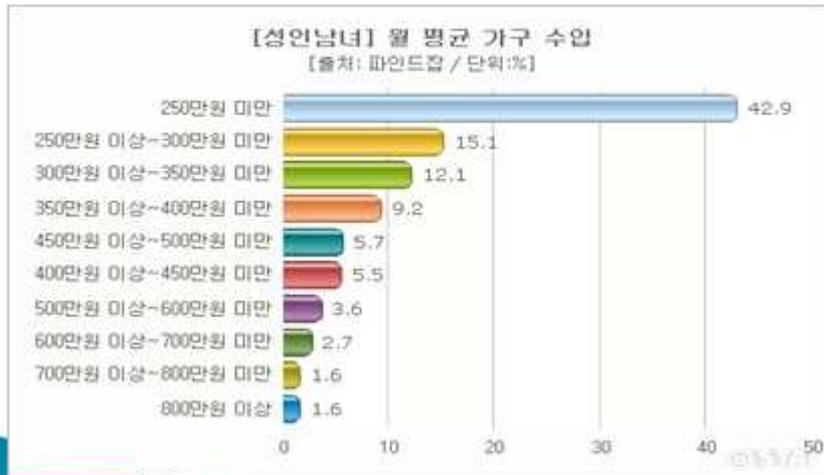
세전연봉 6700만원
이상을 받은
상위 10%
(169만2022명)

하위 10%는
(156만4932명)
450만원 이하로

자료: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 제공
그래픽:이승현 the300 디자이너

1) 민주노총 조합원은 상위 몇%일까? 10 ⇔ 90 사회 X

민주노총의 정규직 주력대오, 그 가구는 상위 10~20%에 해당



우리가 만든 사회, 그동안 무엇을 했는가?

- ▶ 90년대말부터 비정규직 조직, 투쟁이 본격화되다.
 - 한라중공업 사내하청, 재능교육 등 학습지, 골프장 경기도우미, 대학교 청소경비 노동자, 방송사비정규, 한통계약직 등
- ▶ 2003년 민주노총 중심요구, 50억기금 1기 전략조직사업 결의
 - 양날개론에서 또 하나의 전략과제 => 비정규직 문제 전면화
- ▶ 3년 5개월간의 민주노총 총국의 기억(2001부터 2005년)
 - 당시수준에서 할 수 있는 것 원 없이 했다.
 - 사업계획 별 논쟁 없이 다 통과. 2004년 비정규문제 총파업까지
- ▶ 근대 무엇이 문제일까? 왜 임금-소득격차는 더 벌어지는 걸까? 차별은 온존 확대되는 것일까? 왜? 왜? 왜?

왜? 왜? 왜?

- ▶ 진정성이 없다.
- ▶ 결국 사업장 담벼락 안에서 내 문제 해결
- ▶ 당위로는 비정규직, 사회의제 이야기
 - ⇨ 내 발등, 내 문제로 다가 올 때는 부담스러운 문제
- ▶ 일상의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 할 수 없다 술자리 하소연
- ▶ 저들이 노동개악 공세, 임금피크제로 청년고용 이데올로기
 - ⇨ 그제서야 재벌개혁, 청년일자리를..(오래전부터 존재한 문제)
- ▶ 방어, 저지는 할 수 있어도 이기지는 못한다.
- ▶ 수세적 싸움이다.
- ▶ 전략이 없기 때문이다. 이전에 절박성, 진정성이 없기 때문이다.

왜? 왜? 왜?

- ▶ 방어, 수세적 싸움으로 물리고 있다. 왜?
- ▶ 전략이 없기 때문이다.
- ▶ 이전에 절박성, 진정성이 없기 때문이다.
- ▶ 주력대오가 담벼락에서 나오지 않고 자신의 이해관계에 몰입하는 냉혹한 현실. 오래도록 그렇게 해왔다. 존재 조건도 그렇다. 존재가 의식을 규정한다. 당위라도 있는게 그게 어디냐?
- ▶ 현재의 일상의 실천과 활동이 우리를 규정하고 있다.

2) 민주노총을 신뢰하지 않는다.



3) 이제는 민주노총이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



신자유주의 시대, 시대 변화에 둔감하였고
자본의 분할 지배 통제 전략에 대응하지 못하고
정규직-조직노동자의 관성적 작업장 운동을 벗어나지 못하였다.

그럼 어찌자는 것이냐?

조직문화적 관점에서 고민

<지역에 기반한 사회운동노조>

'반자본주의
대안사회'를 위한

노동조합운동은?

지역에서
실현하고자 하는 것

- ❖노동자 민중을 착취하지 않는
평등 세상
- ❖비정규직이 없고 차별 없는 세상
- ❖보편적 가치 실현
 - 민주주의, 인권, 성평등 실현
 - 의료, 교육, 사회서비스(보육, 요양,
간병..) 등 보편적 사회 권리가 보장
되는 세상
 -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이 가능한 세상
 -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세상

- ❖작업장을 넘어 보편적 사회권리 운동
 - ❖생활문화연대운동 - 삶의 변화
 - ❖대중주체의 정치운동
 - ❖변화된 주체 형성(조직만이 능사아님)
- "노조운동 + 사회운동"**
지역을 기반으로!

일상, 삶, 지향과 가치에 주목하자!

그들은 살아 있는 노동자였고
노동자계급이었다.
세월은 흐른다. 일상의 생활도 계속된다.
일상으로 돌아온 그들의 모습에서는
투쟁 시의 흔적을 찾아보기란 쉽지 않다.
결의에 찬 모습은 소심함으로 바뀌었고
주변에 대한 따스한 시선과 연대는
일상의 생활에 묻혀버렸다.

일상, 삶, 지향과 가치에 주목하자!

- ▶ '더불어 사는 삶'과 '아래로 향하는 운동'의 지향을 실현하는 노동조합 활동을 해보자!
- ▶ 생산과 재생산 공간을 아우르는 노동조합 활동.
- ▶ '노동'과 '지역'의 만남. 생활문화연대 활동 전개
- ▶ 오해가 없기를... 현장 강화와 투쟁은 기본. 기본을 하지 못하면서 다른 이야기를 할 수는 없다.

지역사회와 연대 - 더불어 사는 삶 위한 생활문화연대 운동

생활문화연대운동으로 무엇을 하고자 하는가?

- ▶ **생활문화연대전략**: '삶의 변화', 그 자체로도 매우 의미 있는 사업이자 노조 지향 실현(사고, 생각, 의식이 고도로 내면화)
- ▶ **사회연대투쟁전략**: 노동자들이 투쟁할 때 지지, 지원
진정한 노동자의 힘 = 현장의 힘 + 사회적 힘
- ▶ **조직화전략**: 장기간 지역사회와 함께 호흡하고 신뢰를 쌓고 관계를 맺으면서 영세소기업 노동자-동네노동자, 청년노동자 조직을 위한 조직전략이기도 하다.(노조의 지향과 사업은 90% 미조직노동자, 특히 영세소기업 노동자-동네노동자 조직화로 향하여 있다)

진정성 가진 마음을 움직이는 운동

- ▶ 임금피크제 청년고용을 둘러싼 우리들의 논리는 맞다. 정당하다. 근데 마음을 움직이지는 못한다.
- ▶ 머리, 논리로 하는 운동도 필요하지만 가슴으로 심장으로 하는 운동도 필요하다.
- ▶ 아래로 향하는 운동에 동의한다면 비정규직, 청년문제 그대로 둘 것인가?
- ▶ 저들의 이윤을 아래로 흐르게 하면 끝이지만 그걸 쟁취하는 시간, 과정이 걸리고 힘이 부족하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 ▶ 최대한 끌어내면서 우리의 것도 아래로 흐르게....
- ▶ 임금 수준을 조정 -> 청년고용. 비정규직과 격차 해소, 정규직화

- ▶ 민주노조를 지키기 위해 수많은 헌신과 희생을 해왔던
활동가, 조합원을 존중하고 존경
- ▶ 여전히 민주노총에 대한 믿음, 긍지 존재
- ▶ 그만큼 애정 어린 비판도 필요
- ▶ 변화 혁신하고자 하는 노력 존중
- ▶ 머리 맞대고 만들었으면 좋겠다.
- ▶ 뭐라고 잘 했으면, 의미 있는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